

신입생 줄고 재학생 떠나고... 학생·학교 피해, 책임은 누가

文정부, 탈원전 정책서 원전 주력 반전 "교수 사회, 정부 발표 혼란...만시지탄" 2017년 재학생 2777명→2020년 2190명

탈원전 정책을 펴던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 입장을 내놓자 현장에서는 기존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대학에서는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있다.

2월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지 전원으로 충실히 활용해야 한다"며 신항을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정상가동 점검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이어오던 문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이미 학생수가 줄어든 대학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마냥 반기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윤종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면 전력원으로 향후 6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혹스럽다. 교수 사회에서도 다들 이런 반응"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지속해서 말할 때는 듣는 시늉도 하지 않던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카이스트는 2학년 때 전공 학과를 선정하는데, 80명 되던 학생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선언 이후로 매년 줄어들어 현재 25명이다. 이번에 입학한 학생은 3명"이라며 "탈원전 정책 속 학생들과 학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이스트에는 원자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이 대부분인데, 그런 학생이 줄어든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 선배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인데 그걸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강조한 이래 유관 학과 신입생 수는 감소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상반기에는 카이스트 학생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선택한 인원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상황은 반전을 맞지 못한 모습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원자력공학과 등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둔 17개 대학의 2020년 3월 기준 재학생(학사·석사·박사)은 21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8%(160명) 감소한 수치다. 2017년 재학생 수는 2777명, 2018년 재학생 수는 2527명이다.

입학생 감소도 주목된다. 2017년 817명이던 원자력 관련 학과 입학생은 2018년 707명, 2019년 678명, 2020년 524명으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원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장은 "탈원전 5년 동안 학교가 가장 치명상을 입었다. 학교에서 양질의 학생들을 육성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곧 산업에도 타격이 가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원자력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생이 원자력을 공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바꾸는 분위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원전이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동기나 후배들의 전과, 줄어든 신입생 수를 확인한 관련 학과 재학생들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박사과정 중인 조모(32)씨는 "전공 선택할 때는 미래가 밝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사양 산업이 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절망감이 들었다"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말 바꾸는 거 보면 화가 난다. 우리가 경고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급히 말 바꾸는 게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을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독일도 원전을 계속 쓰는 걸 보면 결국

원자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신중하게 정책을 정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뒤집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원전은 10년을 내다보고 인허가 건설을 들어가야 하는데 5년 임기 대통령이 결정할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모(28)씨는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이후 입학생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주변에서는 전기과나 여차하면 기계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나중에는 다른 학과로 전과하기 위해 원자력공학과로 입학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가 입학할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라고 전했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졌다고도 했다. 연구직 공채 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전 환경 인턴직 역시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정부가 일부 여론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며 "예전에는 국가 에너지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탈원전 정책 기간 동안 그런 자긍심이 남아있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남진기자

전광훈, 3·1절 대규모 집회... 선거유세 결합해 인원제한 피해

청계광장서 '1천만 국민대회 및 기도회'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측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선거 유세 형식을 빌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 측은 1일 정오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1천만 국민대회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전 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구본철 후보 선거 유세도 함께 진행했다.

현재 방역수칙 상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지만,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유세 현장에는 인원제한이 없다.

이날 청계광장 일대는 기도회에 참석한 수천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다. 이들은 거리두기가 무색할 만큼 빼곡

히 모여 기도회를 지켰다. 수원·안양·울산·광주·부산 등 전국 각 지명이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인원도 보였다.

또한 대부분 인원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청계광장 일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 등을 했지만,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날 선거 유세는 잠깐이었다. 구본철 후보는 오전 11시30분께 단상에 올라 잠시 연설한 뒤 내려왔다. 이후부터는 교회 목사들이 올라와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하는 등 예배를 진행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전광훈 목사는 오후 2시께 단상에 올라 "광화문이 다시 살아났다"며 "문재인은 끊임 없이 5년 동안 사기극을 진행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 나아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이승만에 이어 세 번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외상값 시비' 20년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60대 노점상 주인이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20년 지기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당시 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달 1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6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야채 및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20년간 알고 지낸 이웃 주민 B(69)씨와 외상값 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크게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B씨가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며 역정을 내자, 순각적으로 격분한 A씨는 욕설과 함께 주

변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고, 내리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9년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슬비기자

신안군 임자면 김 공장 불...40대 직원 화상

1일 오전 6시47분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2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인 4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공장 660㎡가 모두 탔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관 40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소방 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김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안=이택주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